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주민자치 공약분석을 위한 질의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경쟁하는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이해와 정책개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 답변 내용은 월간주민자치와 유효한 방법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 1. 후보자

지역구	정당	후보자명
울주군	무소속	전상환

### 2. 주민자치에 대한 기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헌법,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 등 개정, 주민참여예산·소송·제안·감사청구 제도, 지방분권과 권한이양, 지방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발전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구역, 주민, 자치권의 3요소에 기반하였다. 이 3요소 중 구역 및 자치권에 대한 물리적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주민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의 권한, 감시, 협치(governance)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지방자치시대 20여년이 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다.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는 주체인 지방공무원, 주민의 관점이 다르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2-2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실질화/현실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첫째, 주민, 마을대표, 지방공무원이 지역공동체라는 정체성프레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둘째, 기성세대와 신세대간 문화적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셋째, 지방자치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프레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연구결과를 얻었으나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문화와 융합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명목만 유지할 것이다.

생활민원에 대한 자치적 해결방법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3.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중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와의 관계이며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주민과 관계가 없으면 주민회라 할 수 없으며 정부가 지배를 하면 자치회가 될 수 없습니다.

#### 3-1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 마을대표, 지방공무원이 지역공동체라는 프레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상대를 부정적으로 특성짓고 자신의 손익, 보호, 사회통제프레임 등이 내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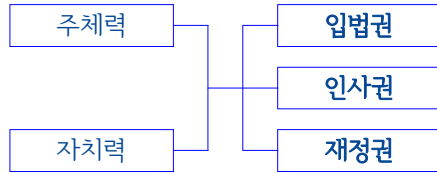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신뢰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져야 하고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 3-2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회와 정부는 평등한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가고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부 인원이 인수인계식으로 회원을 결성하고 회원을 관에서 임명(통읍면장, 구청장/군수, 시장이 임명하여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의회와 총돌의 모습도 있으며 하위구조 개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의 주체가 되어야하고 자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자치를 할 수 없고 자치의 능력이 없어도 자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의 주체역량과 자치역량으로 주민자치회는 입법권과 인사권 그리고 재정권을 필요조건으로 합니다.

3-3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입법권이 필요하지만 이전에 법/조례를 먼저 개정하여야 합니다.  
회칙이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고 선출된 의원들의 권한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위를 가진 정부(국회)가 자치법을 만들었지만 미국은 각 주에서 먼저 실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따르는 모습으로 발전을 하였지요

3-4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임원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인사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회 대표는 지금도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이나 지역의 유지, 선임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통반장이 참여하는 대표와 임원선출을 제한합니다.  
또는 대원의제 형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3-5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회비, 기부금, 수익 등)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다만, 재정 투명성을 위해 감사권을 외부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 집행되는 실태를 보니 관이 지침을 주고 자치위원회가 이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읍면 단위의 회원들은 전문성이 없어 자치위원장, 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의 모습이 없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지역의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여야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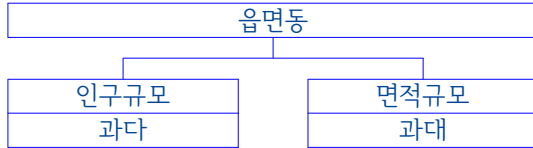
구역	주민	마을일
마을로	이웃으로	나의 일로

주민이 나의 마을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주민자치가 아니며 주민이 이웃으로 승인하지 않아도 주민자치가 아니며 주민들이 나의 일로 승인하지 않아도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역을 대표하여 마을의 공공을 구현할 때 비로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게 됩니다.

3-6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공을 실현하는 지역조직으로, 주민의 공공을 실현하는 주민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이야기 한바와 같이  
주민들의 투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 지역적/나이적 안배 등을 통해 대표성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제 대학이상의 젊은 인재를 회원으로 신청과 승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현업으로 참여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와 임원이 운영하고 주민들도 무보수 비전임으로 참여를 하여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읍면동의 인구 규모는 주민자치회의 적정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고 면적은 과대합니다.

3-7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구역에 설치하였을 경우에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대표/임원이 읍면동 구역에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가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규모와 면적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읍면동은 제가 학술논문 “프레임이론으로 본 지방자치 인식프레임 분석: 울주군 주민, 이장/자치위원, 공무원 대상으로.한국정책학회·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가을”에서도 제시하였지만 법-령-규칙-조례를 잘 모르고 구성원이 지역유지 개념으로 구성되며**  
**인수인계식으로(모집은 하지만) 활동하기에 제한적임.**  
**인원은 법정리에 각 2명과 전문성을 가진사람,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을 20~30퍼센트 포함하면 좋을 듯 합니다**

주민자치회를 행정계층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계층에 설치할 경우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이 중복되어 대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리가 행정보조기구의 자격으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주민자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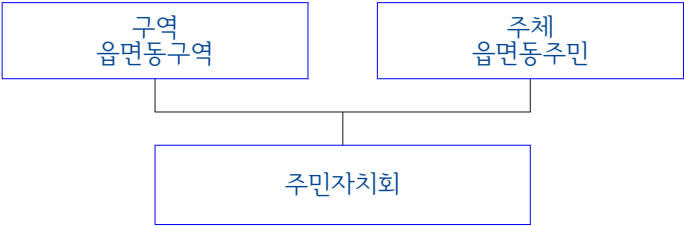
통리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면 지역밀착형이 가능하지만 이미 통리가 있습니다.

3-8 현행 행정 보조기구인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 리회로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반복되는 질문의 형태이지만 이는 대표성, 전문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구성원이 되어야 하나 통, 리장은 30만원을 받은 자치구군 읍면의 통제를 받으며 농협,산림 등의 업무도 대행하고 있어 역할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잘 융합할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4.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읍·면·동으로, 주체를 읍·면·동 주민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준조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이하 표준조례)은 특별법의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빼버리고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4-1 모법인 ‘자치분권법’에서 정한 “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만든 표준 조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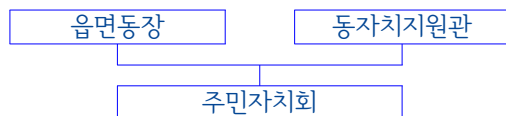
긍정적인면: 읍면에 젊은 전문가가 없을 수 있어 보강이 필요  
(법률, 회계, 세무 등)  
부정적인면: 압력의 행사, 자기 사업의 이익수단으로 이용 등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동자치지원관제도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동자치지원관의 임무는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기획 및 현장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모임 네트워크 구성, 운영 촉진,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자치구 주민 자치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이다.

주민자치회가 할 일을 동자치지원관이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읍면동장지배에서 이제는 동자치지원관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다.

동자치지원관에게 지원되는 것을 주민자치회에 직접 지원하라는 요구가 많다.

4-2 행안부가 권유하고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본업무에 동자치지원관을 실제 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해 본 바

1.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 지원가능, 불가를 결정하고 이를 거수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지자체의 대변인 역할에 불가
2. 동자치지원관은 간사 역할을 부여하되 의제의 결정권 관여가 아니가 법적, 제도적, 지속적 사업추진, 중복성 등을 각 지자체 부서에 의뢰하여 의견을 받은 참고자료로 제공 역할을 하여야 함.

## 5. 주민자치회법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5-1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sup>1)</sup>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중 제25조(주민자치회)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 잘못하면 관변집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2.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3. 정치활동의 제약은 현재에서도 있으나 제약할 필요가 있느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완전 자치라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5-2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sup>2)</sup>을 제정하여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지만

1. 현 주민복지센터와의 명확한 구분 필요
  2. 감사를 둘 경우 회계인원이 필요하고 주민총회의 의결인원, 위원 제명, 구체적인 총회소집인원 필요. 해산이 3/4이상의 경우와 법적인 문제 등 구체화 필요
- 종국적으로 주민복지센터의 읍장과 자치위원장이라는 2개의 단체를 두어야 하는 문제까지 대두

## 6.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유럽의 헌법 보장과는 달리 지방자치의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에서 연합정부가 만들어지는 역사적 사실로 인해 주정부의 권한이 강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통치형태로 명분상의 지방자치(1948년 ~ 1961년), 지방자치의 단절(1961년~1987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태동(1987년~1995년)을 거쳐 지방자치 성장(1987~현재)에 이르고 있다(김석태, 2014). 이러한 법률, 역사,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여건을 고려하여 권한이양(devolution)에서 지역주권(local saverynty)으로 집권적 분산제도(centraized-doconcentrated system)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학술발표를 통해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 2)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읍·면·동 안에서 주민이 지역적인 공동활동을 함께 하며 자치할 수 있는 적정구역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 회원의 자격과 구분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주민자치회의 설립 등) ①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마을 주민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창립총회의 의결은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1조에 따른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로 분할하거나 다른 주민자치회와 통합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주민자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으로 하고 있는 마을
4. 사무 및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설립인가) ① 제5조제1항의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자치회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선출 방식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대표자의 직무 등) ① 대표자는 주민자치회의의 모든 사무와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대표자는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③ 대표자는 대표자의 이익과 주민자치회의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계의 감사와 직무의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회계나 직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자가 그 기간 이내에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회원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의의 사무 및 사업은 정관에서 대표자 또는 직원들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주민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의 특정 구성원과 관계가 있는 의결의 경우 그 구성원은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비치 서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산 목록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시설 보유) ①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산) 주민자치회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제16조(주민자치회 협의체) ①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규약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7호 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을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각각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